

이덕일의 '역사의 창'



‘처벌 강화’ 능사가 아니다

‘민식이법 놀이’ 영상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의 횡단보도 근처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량이 다가오면 뛰쳐나가는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식이 법’은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제정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운전자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처벌 강화가 문제 해결의 첩경은 아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에게 패배한 이유 중의 하나로 남편인 클린턴 대통령에 확대시킨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꼽는 경우가 있다. 1994년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세 번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종신형에 처하게 만든 법이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인데, 클린턴 대통령이 이 법의 확대를 지지하면서 수감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5% 남짓이지만 교도소 수감자 수는 2015년 약 220만 명으로 전 세계 수감자

의 25%나 된다. 미국의 인종 구성은 백인 64%, 히스패닉 16%, 흑인 12%지만 수감자는 흑인 40%, 백인 36%, 히스패닉 21%로서 흑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라는 에이바 듀베네이 감독의 다큐멘터리가 있다. 1864년 수정헌법 제13조로 노예제는 공식 폐지되었지만 수감자를 예외로 두면서 흑인들을 대거 수감해 노예제가 사실상 계속 유지되었다는 시각이다.

20세기의 수감자 폭증은 공화당 소속의 닉슨과 레이건이 1970년-80년대 ‘로 앤 오더’(Law & Order) 또는 ‘저스트 세이 노’(Just Say No) 등의 구호로 범죄 및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계기였다. 마약 소지 같은 경범죄도 무조건 일정 기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는 ‘최소 의무형량 제도’가 실시되면서 수감자가 폭증했다. 1984년에 3만4천 명이던 종신형 수감자는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 이후 2012년에는 16만 명으로 늘었다. 수감자 아홉 명 중 한 명이 종신형인 실정이다.

교도 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도 연간 800억 달러, 100조 원 수준이다. 고령자 한 명의 수감 비용은 1인당 연간 6만~7만 달러(6700~7800만 원)로 일반 수감자의 두 배가 넘는다. 수감자가 급증하니 민간 교도소 사업이 활개를 치는데 이를 가리키는 ‘범산복합체’(犯産複合體:prison-industrial complex)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군부와 방산기업이 결합한 군산복합체

(軍産複合體)에 빚어 범죄 처벌이 기업과 결탁했다는 뜻이다. 2016년 대선 때 가족이 수감되어 있던 흑인·히스패닉들이 클린턴의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에 대한 반감으로 기권하거나 트럼프를 지지한 결과 트럼프가 당선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7월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오클라호마주 엘리노의 연방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 1명을 1년 동안 가두는데 쓰는 비용으로 1명의 공립대학 학생 학비가 없어진다”면서 ‘최소 의무형량’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도록 의회에 요청했을 정도로 단순한 처벌의 가중 확대 정책은 철저한 실패로 끝났다.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닉슨과 레이건의 정책을 계승했던 클린턴의 정책은 범죄 처벌을 산업으로까지 만들었지만 강력한 처벌이 사대의 해결책이 아님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남았다.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이 저해되는 것은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법은 힘없는 민초들에게는 추상(秋霜: 가을의 찬 서리) 같지만 권력과 돈이 있는 지배층에게는 춘풍(春風: 봄바람)보다 부드럽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 현실이 바뀌지 않은 채 처벌만 강화해 봐야, 법조계 사람들 주머니만 채워 주거나 힘없는 민초들의 괴로움만 가중시킬 뿐이다. <순천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턱관절 장애



김선중 동신대 목포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

계 벌리기 힘들거나 턱 주변 부위의 통증이 있다. 또한 턱이 자주 빠지고 느슨한 느낌이 들거나 단단한 음식을 씹을 때 턱의 통증이 느껴지거나 얼굴과 목 근육에 긴장을 일으켜 두통과 어깨 결림이 발생하기도 한다. 컷 속에서 불편감이 느껴지거나 입을 크게 벌린 후 잘 다물어지지 않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나아가 손상된 쪽의 턱관절이 잘 열리지 않아 안면 비대칭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비정상적인 턱의 움직임이 있는지, 턱관절의 운동 범위가 감소하였는지, 저작근의 압통이 있는지, 자세의 비대칭이 있는지, 목과 어깨 근육의 통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진단한다.

‘턱관절 장애’는 생활 습관만 바르게 유지해도 예방할 수 있다. 한쪽 치아로만 음식을 씹어선 안 되며 껌을 자주 씹지 않는 게 좋다. 자신도 모르게 이를 악물고 다니는지 확인해야 하며 휴대전화를 목과 어깨 사이에 낀 채 통화하는 습관도 고쳐야 한다.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볼 때 턱을 받치는 행동이나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을 삼가야 한다. 껌을 자주 씹거나 긴장할 때 손톱이나 연필 끝을 씹는 습관도 좋지 않다.

또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도 주된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

턱관절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한의학에서는 턱관절의 국소 부위 관절을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해 치료하거나 경락학설과 음양학설을 기반으로 정신을 하나로 유지적 정제로 보아 턱관절의 자세를 교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턱관절 장애의 한방 치료로는 침, 약침, 한약, 추나, 운동, 구강 내 균형 장치, 매선, 한방 물리요법 등이 있다.

침 치료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어 통증을 완화시킨다. 약침 치료는 통증 완화, 염증 완화, 면역 강화의 효과가 있다. 한약은 스트레스나 긴장이 심한 경우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기운을 북돋울 수 있고, 관절이나 근육이 약해진 경우는 환자의 기혈과 오장육부 허실에 따라 관절을 보호하고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 추나 치료는 상부 경추의 교정, 턱관절에 대한 직접적 정복술을 시행해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고 관절의 움직임은 정상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수면 중 이갈이로 발생한 턱관절 장애나 부정교합의 경우 구강 내 균형 장치를 통해 치료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혈자리 위에 약실을 삽입해 지속적인 자극을 유발함으로써 치료하는 매선 요법, 통증 개선과 기능 회복 효과가 있는 한방 물리요법 등이 있다.

기고

‘호국 보훈의 달’에 드리는 제언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전남은 고고비마미다 국난의 물줄기를 바꾼 저력 있는 의향이다. 임진왜란 당시 확인된 의병 중 50%, 전국 항일운동의 중심지로 한말 후기의 의병의 45%가 호남 출신이다. 1919년 3·1만세운동과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등 도내 전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기념하고 추념하기 위한 기념관이나 기념탑 등 현충 시설들이 114개소에 이른다. 나주시에는 테마 정원, 체험 공간 등 추억과 기억의 장소로 임진왜란부터 3·1운동까지 역사를 집대성하는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이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다.

지난해 10월 도청 소재지인 무안군 삼향읍 중앙동산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전남 항일독립운동 기념탑’을 건립한 바 있다. 기념탑은 어르신들에게는 과거를 만나는 공간으로, 젊은 사람들에게는 잠시 쉬어가는 휴식 공간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배움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8월부터는 조국 독립에 헌신했지만 자료가 부족하여 지금까지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시기와 주제별로 나누어 서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 한 분의 독립운동가를 찾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자긍심을 드높일 계획이다.

도내에는 12개 보훈단체에 42만 7000명의 보훈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호국 순례,

위안 행사, 선양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보훈 가족에게 최선의 예우를 다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유공자들에게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고,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 풍토 정착과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보훈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그러나 희생의 대가에 비해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5·18 민주 명예수당과 참전 명예수당을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합당한 예우와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세심히 보살필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은 참전 명예수당이나 보훈수당 등은 지자체별로 부담하고 있어 재정 형편에 따라 지역마다 차등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연령별로 수당의 차이가 많아 보훈 가족들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지급되는 각종 보훈 수당을 정부가 일원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모든 국민이 조국과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쳐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 주신 선열과 보훈 가족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 굳건한 안보 의식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를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희생의 토대 위에 있음을 잊지 말자.

6월에는 가까운 현충 시설을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것은 어떨까?

社說

이주노동자들 차별과 냉대에 눈물 짓는다

농어업 현장에서 매일 장시간 일하는 전남 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냉난방시설이나 화장실조차 없는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거나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전남 14개 시군에 체류하고 있는 네덜·미얀마·베트남·캄보디아 등 7개 국적의 이주노동자 177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의료 실태와 인권 침해 현황 등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우선 설문에 참여한 이주노동자 중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이하로 근무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19.6%에 불과했다. 하루 평균 9~10시간 일했다는 노동자가 46.4%로 가장 많았고 11~12시간 22%, 13시간 이상 11.9%에 달했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한 달 평균 근로 일수(25일)와 일평균 근로시간(11시간) 및 최저시

급(2020년 8590원)을 토대로 계산하면 236만 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192만 5000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주거 실태에 대해 응답한 이주노동자 151명 중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임시 건물에 살고 있다는 이들이 25.8%나 됐다.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세 명 중 한 명꼴로 다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가 병원에 보내 주지 않거나 아픈데도 일을 강요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2.8%에 달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이주노동자들이 얼마나 힘겹게 타국살이를 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 준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전남의 농어업 현장은 내국인들이 떠난 빈자리를 이주노동자들이 채우며 어렵사리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에 대한 차별과 냉대는 여전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한 때는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 번 돈으로 경제성장의 물결 토대를 마련했다. 이제는 우리가 이주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국에 분산돼 있는 5·18기록물 한데 모아야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 민간 기록물이 보관돼 있다. 정부 문서 등의 기록물은 성남에 있는 나라기록관에 있다. 그리고 일부 민간기록물은 5·18 기념재단 등이 소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관 장소가 제각각인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국가 차원에서 한데 모아 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홍보 활용 방식의 과거·현재·미래’라는 주제로 엮고 그제 열린 학술포럼에서는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이를 위해 가칭 ‘5·18역사기행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포럼에서 김재순 나라기록관 관장은 “호남권에 국가 차원의 기록유산 보존 시설을 신축해 동일한 단지에 여러 5·18기록 관련 단체가 함께 입주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

했다. 실제 호남권에는 국가 차원의 기록 유산을 종합적으로 수집·보존하고 학술 연구 자료 등을 서비스하는 기록관이나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반면 영남권에는 부산의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이, 수도권에는 성남에 있는 나라기록관이 있다. 또 충청권에는 정부 대전 청사 인근에 2013년에 설치한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이 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5·18 관련 기록물 한데 모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할 당위다. 지금 5·18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조망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5월의 세계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정부는 ‘5·18역사기행관’ 설립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선언은 1789년 8월 프랑스 시민혁명 당시 라파에트가 기초한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 즉 인권선언일 것이다. 루이16세 당시 막강한 권력이었던 성직자와 귀족에 들지 못하는 제3 신분인 평민들이 주축이 되어 국민의회 구성, 테니스코트 서약, 제헌의회 선포 등을 거쳐 완성한 혁명은 많은 성과와 유산을 남겼다.

봉건 제도의 폐지, 루이16세 처형, 부르주아 계급의 부상, 강대국 프랑스 성립 등이 그것이다. 인권선언은 이후 프랑스 헌법(1891년)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에도 반영됐다.

1848년 2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선언 역시 근대 세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이밖에 1992년 6월 14일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도 인류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19년 3월 1일 33인의 민족대표들의 3·1 독립선언을 시작으로, 6·29 선언, 6·15 남북 공동 선언,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등이 있었다.

광주가 지난해 10월 ‘광주 도시·건축

선언’을 발표하고 최근에는 그 매뉴얼까지 제시했다. 광주의 현재 모습이 미래 세대에 당당히 물려줄 수 없는 수준이라는 반성에서 출발한 이 선언은 역사·경관·공공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다만 광주의 현재 모습을 있게 한 원인이 무엇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지적도 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돼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찾아보기 어렵다.

광주도시·건축선언에 쓰인 미사여구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선언은 단지 선언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고층 아파트 숲들이 곳곳에 들어서게 된 원인에 대한 분석,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 광주의 모습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바람직한 미래 도임을 위한 법·제도 및 지침의 혁신 및 실행 방안 등이 마련돼야 비로소 명실상부한 선언으로 자리를 잡고 시민들에게도 각인될 것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